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 노동시장정책 전환해야

- 2012 정당별 대선후보 노동시장 정책 비교

2012.9.13

김수현 새사연 연구원 (sida7@saesayon.org)

5년 전에 비해 올해 대선에서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이는 정책 부분이 바로 노동시장 정책이다. 물론 5년 전에도 일자리 정책은 명목상 가장 중요했지만, 300만 개, 500만 개 식으로 의미 없는 일자리 개수 경쟁만 난무했고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이 위주이다 보니 무게를 둘 수 없었다. 그러나 18대 대선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수요창출 정책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제안들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 나아가 단순한 일자리 개수를 넘어 나쁜 일자리 개선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차별과 격차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정책들도 공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사내 하도급법처럼 일부 제안들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차별해소에 역행하거나 역부족인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사연은 일자리 창출과 차별과 격차 해소, 그리고 저임 노동자 지원이라는 범주에서 주요 대선후보 정책을 비교 평가해 보았다.

둔화되는 고용률 상승세, 심화되는 불평등, 노동시장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나?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낮은 성장률과 고용률, 점점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원인으로까지 거론되는 상황 때문일 것이다.

노동시장 정책 전환과 관련된 최근 대선후보들의 공약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이는 전체 일자리 수를 늘리는 정책과 함께, 청년, 여성, 중고령자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위한 정책들을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및 노동시장 내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이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저임금 노동자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는 대선후보들의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에 대해 알아보고, 그 공약을 통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또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일자리 창출 정책 비교

일자리 창출 정책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대선후보들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현재 모든 대선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세우는 정책 중 하나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손학규 후보로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이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손학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후보들 역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총선 시기 모든 당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연평균 노동시간을 2,000시간 미만으로 줄여 장기적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주 5일제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고용률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각 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경우 노동시간을 줄이는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등에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단축한 주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국내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간을 줄인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혜택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 파견기업의 경우 노동시간은 대기업의 노동시간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강조하고 있는 규제방안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혜택을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실행에 있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을 막는 방안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다른 당들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새누리당의 경우 시간제 정규직을 노동시간 단축의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정규직의 확대는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로 볼 수 있는 노동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단시간 노동자를 증가시키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시행될 경우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악화를 가져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노동시장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정규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방안을 통해 안정된 정규직 노동자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일자리 창출 중점 분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각자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과 분야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우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우 출마선언문에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문화·소프트웨어 산업과 아이디어·벤처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후보들은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복지분야의 확대와 함께 사회서비스산업의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세균 후보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분야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실행가능성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제조업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껏 우리 경제가 목표로 삼아 실행해 온 전략이기도 하다. 또 문화·소프트웨어 산업과 아이디어·벤처 창업 지원





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이미 실행했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한 정책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지금의 선연적인 수준의 공약으로는 어떻게,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공약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대한 지원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것처럼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수는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민간수요 증대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2000년대 중반보다 2배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이런 사회서비스 산업의 수요는 고령화, 복지의 확대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책 속에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줄이는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양상을 살펴보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가 고용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증가하는 민간수요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이 계속될 경우 사회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 청년, 여성, 고령자에 대한 고용지원방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약에는 청년, 여성, 고령자와 같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청년고용을 위한 공약으로는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확대,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여성 고용률 상승을 위한 공약으로는 여성일자리 확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 성평등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자, 장애인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 교육과 일자리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일자리 확대에 있어 중요한 것은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정책과 함께 노동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청년고용문제와 여성의 낮은 고용률이 개선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노동수요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공급을 확대시키는 정책만 추진했기 때문이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노동공급 정책만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노동수요 증대가 한계를 보이는 지금 이들의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청년고용할당제,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여성 및 중고령자 고용 정책, 장애인 고용할당제 등의 적극적 노동수요 확대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이러한 적극적 노동수요 정책을 내놓은 당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다. 이들은 청년고용할당제,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 등과 같은 적극적인 노동수요 정책을 노동공급 정책과 함께 제시하였다.

반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청년인턴제, 중소기업을 통한 청년고용확대 등의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의 노동수요 정책 밖에 내놓지 않았다.

이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경우 향후 정부의 도움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직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정책들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향후 재원, 실행방안,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장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비교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확대된 비정규직은 2012년 3월 현재 837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742만 1천명 중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38만 9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 278만 3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사회보험 지원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 정책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이처럼 노동시장 내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총선 승리 이후 “희망사다리법”이란 이름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을 발표하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희망사다리법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은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차별을 시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차별을 당한 비정규직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대표나 노조를 통해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차별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차별행위로 얻은 이득의 10배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있다. 또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사내하도급법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작 노동자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 가장 큰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내하도급법이다. 새누리당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는 법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이 시행될 경우 현재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조업 내 파견 고용이 사내하도급을 통해 합법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제시한 법안은 차별 시정에 있어서도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차별적 처우에 대해 사용자가 10배 내의 금전보상을 하도록 했지만 법안 내 차별대상과 차별처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다는 점, 사업장 내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없을 경우 차별 시정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차별시정 신청자를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자 또는 가입된 노동조합으로 국한한 것은 차별 시정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민주통합당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또는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외치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규제 법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김두관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정당, 양대노총,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주국정협의회나 문재인 후보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전국민 고용평등법 등과 같은 공약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선언적인 수준에 머문 공약들이 많다. 구체적인 실행방법, 규제 방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각 당 대선후보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들은 불법파견, 위장도급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



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도록 하는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 보조금 지원 정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에 더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적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내하도급 등 희망사다리법을 통해 제안한 법안들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을 줄이기보다는 비정규직이 받는 차별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자체를 줄이는 정책 역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노동시장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 심각한 수준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중장기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저임금 노동자 지원 정책

2012년 3월 현재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노동자로 보았을 때, 506만 7천명의 저임금 노동자가 존재하며 그 비중은 29%에 해당한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20만 원이다. 저임금 노동자는 비정규직 일자리와 관계가 깊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52.3%가 저임금 노동자이며, 저임금 노동자의 86%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이에 각 정당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공약들과 함께 이들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 및 지원강화, 10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모든 저임금 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완화 등의 정책을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실업부조 도입, 고용보험 해소 등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책 마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모든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문제에 노출되기 쉬운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4대 보험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5.5% 밖에 되지 않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비율도 각각 30.9%, 36.8% 밖에 되지 않는다. 정작 사회보험이 필요한 이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정책과 함께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임금 상승 정책도 필요하다. 이는 최저임금의 상승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1988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2012년의 최저임금 4,580원이다. 하지만 이런 최저임금제도가 낮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많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인상수준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최저임금의 인상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역대 정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후보들과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안철수의 경우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상승시킬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의 하한으로 한다는 내용이 최저임금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개선도 논의가 필요하다. 몇 해째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파행적인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 동일인원 추천을 통해 균형적인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를 꾸리거나,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등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파행을 막을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 노동시장문제 해결해야

이상 각 당의 노동시장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침체된 고용률을 상승시키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여성,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함께, 노동시장 내 만연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노동시장이 문제라는 상황인식과 노동시장 내 만연한 차별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선후보의 공약들이 실제 노동시장의 문제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에서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 노동시장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시장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연기했을 뿐, 노동시장 차별구조와 같은 문제들은 오히려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나아가 이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 정책은 노동시장 문제의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 경제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을 통해 이런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수준의 노동시장 공약들이 모든 대선후보들을 통해 발표되길 기대해 본다.



새사연의 6년 연구결과를 모두 모은 새 책!

리셋코리아

"18대 대통령이 꼭 해야 할 16가지 개혁"이 출간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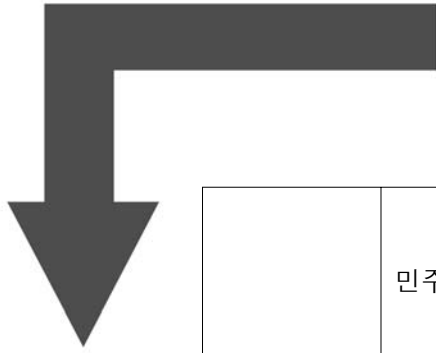




2012 정당별 대선후보 노동시장 정책 평가



일자리 창출 정책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새누리당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혜택 → 대기업의 영향 하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단순히 혜택만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불가능, 규제가 동반되어야 함 시간제 정규직 노동자 확대 → 시간제 정규직 노동자는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민주통합당	장시간 노동하는 기업에 규제 → 전체 정규 노동시간 단축이 동반되어야 효과적
일자리 창출 중점 분야	새누리당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문화소프트웨어 산업 아이디어 벤처 창업 지원 → 모두 이제까지 시행해 온 정책들로 효과를 보지 못했음, 산업의 발전이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 동반되어야 함
	민주통합당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분야 → 금융위기에다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늘고 있으며, 향후 고령화 사회 대비에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정책, 다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정책 동반되어야 함
청년, 여성, 고령자 고용 지원	새누리당	청년인턴제 중소기업청년고용확대제 → 기존에 제기되고 시행되고 있는 정책
	민주통합당	청년고용할당제 여성 일자리 확대 → 기존보다 적극적인 노동수요창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음
노동시장 내 차별 해소		
비정규직 차별 해소	새누리당	희망사다리법 → 현재 불법인 제조업 내 파견 고용을 사내하청노동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우려 있음, 차별대상과 차별처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으며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없을 경우 차별 시정 근거가 없음
	민주통합당	민주국정협의회 전국민고용평등법 → 구체적 실행 방법 없는 선언적 구호에 그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새누리당	비정규직 축소보다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중점 → 비정규직 축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 어려움, 비정규직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함



	민주통합당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근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보조금 지원
저임금 노동자 지원	새누리당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 확대 및 지원 강화 10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노동자 및 사업주 에 대한 사회보험료 완화 최저임금 인상
	민주통합당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보험 해소 최저임금 인상

* 발표된 자료에 기반하여 정당과 대선 후보의 공약을 종합하여 정리

